뉘른베르크 – 평화와 인권의 도시

마쿠스 쾨니히 [독일 뉘른베르크 시장]

뉘른베르크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1933 년부터 1945 년까지 나치주의 역사와 많은 관련이 있는 도시입니다. 나치당의 전당대회가 열린 곳이자 비인간적인 "뉘른베르크 인종법"을 공표한 곳이며, 뉘른베르크 재판으로 당시 나치 정권의 대표자들에 대한 판결과 나치 범죄의 사법적 차원의 징벌이 내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흔적들은 현재 건축물로 우리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대회의장이 있는 전 전당대회 터와 법원에 순회재판법정 600 호는 이제 이 도시를 떠올릴 때 늘 떠올리는 것들입니다.

뉘른베르크의 역사에서 이 "죽음과 연관된 증거들"은 1993 년 인상적인, 실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예술작품이기도 한 인권의 거리와도 대비됩니다. 이 인권의 거리는 27 개의 원기둥, 두 개의 바닥 석판, 하나의 기념비, 하나의 힘있는 아치로 연결돼 있고, 각 부분에는 세계인권선언문의 조항이 하나씩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인권의 거리를 만든 당시 뉘른베르크 전 시장이셨던 페터 쇤라인 전 시장님(Dr. Peter Schönlein)께선 건축공사가 시작되기 전, 현장 축사에서 이 건축사업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뉘른베르크는 엄중한 과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뉘른베르크 시가 평화, 화해, 이해, 그리고 인권 존중에 어긋나는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1993 년 10 월 24 일에는 화려한 준공식이 열린 날인데요, 같은 날 1995 년에 처음 시작된 국제 뉘른베르크 인권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이 인권상은 개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권을 위해 애쓰신 분들에게 2 년에 한 번씩 수여됩니다. 이 상만큼 또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권에 관해 빼놓을 수 없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프리덴스타펠(평화 축제; Friedenstafel), 뉘른베르크 국제인권영화제 "페르스펙티베(관점; Perspektive)", 독일 인권 영화상 시상식, 뉘른베르크 시민을 위한 인권 및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 및 포괄적 차별금지 조치 등입니다.

뉘른베르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이 도시에서 인권에 대한 활동을 활발히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동체이자 인권 보호의 의무를 지닌 공동체의 중요한 동력전달장치가 바로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공공행정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행정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및 사회적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와 기술적 인프라, 그리고 공공재를 마련하고 지원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핵심 역량이죠. 그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지방자치와 행정이 사회적 평화와 공동체의 유대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권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문화 간 교류를 활발히 하고 사회에의 참여 평등과 성 평등, 기회의 형평성을 창출하며 인종주의와 소외를 멀리하고자 합니다.

2001 년에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 시에서 인지하고 이를 시의회 내 대형 회의실에 앉아 시각화하였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있는 의원들이 평화와 인권의 도시가 가지고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 내 인권보호를 위한 유럽 헌장, 통합 정책 지침,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유럽 도시 연맹의 10 가지 행동강령 (ECCAR)이라는 세 가지 문서를 통해 우리 뉘른베르크 시에서는 인권보호 문제를 단순히 도시 공동체의 가치 기반으로만 삼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인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한다는 명시적 임무로 삼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소

뉘른베르크 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세워진 인권사무소가 도시 내 인권에 대한 문제를 주로 처리합니다. 이 인권사무소가 시와 시민단체의 연결점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 차원의 결정을 인권 문제를 고려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며, 이러한 점이 보다 널리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시민단체로 하여금 살아 있는 인권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뉘른베르크 시 내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체들 간의 포괄적인 대담의 장을 열고, 비정부기구, 교육주체,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인권을 국가 이외의 차원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게 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공동체, 즉 개개인도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노력이 없다면 평화와 인권의 도시라는 청사진은 결코 실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노력을 보여주는 한 예는 우리 시에 있는 "인권의 원탁(*Runde Tisch Menschenrechte)*"입니다. 이 원탁은 각 도시행정과 교회와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대표들이 모여 인권 관련 원칙의 확대를 도입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인권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독립적이면서도 초당적인 자리입니다. 2016 년에는 "종교 의회(Rat der Religion)"가 세워졌고, 여기서는 도시 공동체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인들이 만났습니다. 종교 간 대화를 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 정치적 현안들을 종교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의견을 내는 기능도 했습니다.

인권사무소는 도시행정 내에 존재하는 전략 사무소의 기능을 넘어, 현 정부의 과제 전반을 살펴보고 조직하는 기능도 하였던 것입니다.

차별금지와 평등

뉘른베르크 시는 국가, 민족, 문화, 종교적 정체성이 모두 다른 각 사람들이 매일 생활하는 세계 각지에서 특별히 차별 금지에 대한 책무를 지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차별에 관한 문제를 주의 깊게 다뤄 왔습니다. 2011 년부터 우리 시 내에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돕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차별, 구조적 차별을 없애고 개개인에게 도움과 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정보 관련 및 홍보 활동의 형태로 진행하는 예방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피해 경험을 대부분 알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 위협 또는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의 피해 경험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뉘른베르크 시 내에서 차별 금지 조치의 목표는 사건을 체계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개별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 절차에 따라 차별 사건을 다루고 정치적 자문까지 제공하여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매년 약 200 명이 시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개인에 대한 일회성인 차별 사건만 겪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차원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받는 생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개별 상담 및 팀 상담, 합의와 화해 시도에서 (이문화) 중재 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도움을 지원합니다. 범죄 또는 구조적 형태의 차별인 경우에는 적절한 법적 수단도 참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단계이든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람 본인이 스스로 일어날 힘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전용 상담소, 이민자 통합 담당 기관, 성 소수자 상담소, 남성 전용 상담소, 보건기관과 경찰서, 시민단체, 그리고 연방정부의 차별 금지 센터와 같은 특별 상담 센터들과 긴밀한 네트워킹도 추진합니다.

전반적인 평등 및 차별금지 정책은 사회적 소외를 최대한 멀리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평등을 위한 시 차원의 행동 계획은 성 폭력에 대응하고 난민의 소리를 듣고 성 소수자들의 걱정을 들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가 마땅히 해야 할 과업의 일부입니다.

인권 교육과 민주주의 교육

인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평등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차이점을 보여 주고, 문화적 및 종교적 다양성을 위협이 아닌 풍요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과 인종주의를 무거운 주제로 다루고 시민의 도덕적 용기와 참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권사무소가 하는 민주주의 향상의 초석입니다.

인권을 고려하는 관점에서 어떠한 주제에 접근하는 것은 교육적 활동과 예방 조치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고려한 기반이 없다면 이는 현재의 극우주의, 포퓰리즘, 종교적 급진주의에 맞설 수 없는, 그저 다수에 의해 이끌어지는 통치의 수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뉘른베르크 시는 과거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거듭하는 노력을 하는 도시입니다. 역사적 과오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인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시 내에 있는 건축물 몇 개 세웠다고 역사를 기억하는 책임을 다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화가 필요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교육적 작업이 필요하며, 과거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역사의 사건에서 미래에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할 지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일어나는 소외와 폭력의 메커니즘에 주의를 기울이며 과거를 돌아보아야만이 비로소 과거를 돌아보는 활동을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터에 있는 문서 기록 센터와 뉘른베르크 추도식장(Memorium Nürnberger Prozesse)을 통해 두 개의 역사적 및 정치적 기억과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적 계몽과 민주주의 교육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동질적인 “민족 공동체”라는 개념만 갖고 있다고 해서 공동체적 결속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장소에서는 독일인들이 과거 인종차별적 소외로 이어진 사회 형성 이데올로기로 어떻게 인간 문명의 퇴보를 초래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참여하는 각 집단에게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가, 경찰, 군인, 법조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현재 어떤 책임을 각 직업에서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합니다.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해야 할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반유대주의 경향, 인종차별주의, 외국인 혐오주의를

비롯한 다른 여러 형태의 집단 간 인간 혐오의 행태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때입니다.

광주 시와 우리 시는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걸어왔지만, 공동의 추구하는 바가 있어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다양하고 이문화적 사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문화적, 민족적, 그리고 기타 여러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타인의 평등함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불평등의 이데올로기는 모든 차별과 인간혐오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는 담론을 다양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억의 문화를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전에는 독일 다수의 공동체에 집중되었던 논의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질성이 공존하는 대도시 공동체의 관점과 주장을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뉘른베르크 시민의 약 46%가 이민자입니다. 이는 곧, 뉘른베르크 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다른 역사적 및 정치적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각 출신국에 따라 불평등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출신 국가에서 온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서 그들이 독일에서 성장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역사의 정치적 및 도덕적 면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급진주의와 극우주의에 대한 예방 조치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인간을 혐오하는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바 있듯, 독일 내에도, 뉘른베르크 시 내에도 아직 많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적, 종교적 소수 집단, 장애를 가진 사람들, 동성애자를 비롯해 심지어 무신론자에 대해서도 혐오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세계관이 다시금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우익 정당과 언론들은 난민을 돕는 시민사회, 교회 공동체,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종교는 소외와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젊은이들을 폭력적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집단적 인간 혐오”라는 개념에 포함된 공통적인 핵심 현상은 바로 사회에서 개별 집단의 동등성과 안전할 권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데올로기가 부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평등과 인간 존엄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행태를 저지하지 않아 널리 퍼지고 사람들에게 통하게 되는 순간 한 국가의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종교적 급진화에 대한 뉘른베르크 예방 네트워크와 유럽 대도시 반 극우주의 연맹을 통해 뉘른베르크 시는 이러한 포괄적 연맹으로 정치, 행정, 시민사회 단체,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에 반대하고 인간을 적대시하는 이슬람 선동가들의 활동에 맞서고 극우정당과 집단화, 또 그들의 공동체의 비옥한 근간을 흔드는 이데올로기에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네트워크로 연결된 500 개 이상의 파트너들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정보 시스템 등을 개발하여 특히 극단주의 그룹화 시도에 젊은이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주체로서의 도시행정

이와 관련해 도시행정 차원에서 해야 할 업무도 있습니다. 도시 행정 자체가 인권보호라는 숭고한 과업을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과 평등한 정책을 수행하는 고용주 및 발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품의 공정한 구매도 모든 직원에 대한 평등함 실현과 모든 시민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 행위에 해당합니다. 뉘른베르크 시는 이렇게 10 년 전부터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 받았으며, 이미 수많은 시범 기관과 함께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수행하는 데 동참하였습니다.

인권과 코로나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우리에게 닥친 제한 조치들로 인해 분명 각 도시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우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도 인간의 기본권과 인권은 계속해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뉘른베르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통합에 있어 그 토대와 원칙이 되는 평등함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시행하는 모든 조치는 노인, 어린이와 청소년, 노숙자, 장애인, 난민을 비롯해 비좁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서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공동의 여정에서 누구도 낙오시키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이 약속을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